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0. 9. 1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비용보전 지원과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(9.18일 매일경제)

- ◇ 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비용보전 지원은 사실이 아님
- ◇ 9.18일 매일경제 <탈석탄 손실까지...국민들이 낸 전력기금서 메운다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
- ②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되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운전기간 30년 도래 석탄발전 30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 - 금번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는 향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발전소에 대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폐지의향을 토대로 반영된 것이므로 비용보전 계획은 없음

- 다만, 에너지 전환의 이행을 위해 추후 석탄발전소를 설계수명보다 조기 폐지할 경우에는 비용보전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

*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전제

②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름

- 향후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적법·정당 여부 등에 대한 비용산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집행될 예정이므로,

-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

※ 문의: 윤요한 전력산업과장(044-203-5150) / 박은표 사무관(5153)
이옥현 전력시장과장(044-203-5170) / 김은성 사무관(5172)
서기웅 원전산업정책과장(044-203-5320) / 최준근 사무관(5294)